

No. 2013-45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11. 11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
: 미일간 최대 TPP 쟁점은 쌀, 자동차, 관세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1 일본경제지표

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미국의 조기 금융완화 축소예상, 미·일의 주가하락으로 약세
- 장기금리 : 미국의 조기 금융완화 축소예상 및 미·일의 주가하락 등으로 한 때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인 0.58%까지 하락

| 구 분 | 11.4(월) | 11.5(화) | 11.6(수) | 11.7(목) | 11.8(금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 | - | 98.48 | 98.54 | 98.65 | 98.20 |
| 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 | 1,076.32 | 1,076.96 | 1,077.84 | 1,076.42 | 1,080.69 |
| 닛케이평균주가(종가) | - | 14,225.37 | 14,337.31 | 14,228.44 | 14,086.80 |
| 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 | - | 0.600 | 0.605 | 0.590 | 0.585 |

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2013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로는 8개월 연속 상승
- 2013년 9월 무역수지는 9.3천억 엔 적자로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
* 對한국 무역수지는 1.9천억 엔 흑자로 전월보다 소폭 확대

| 구분 | 2012 | 2013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 실질GDP증가율(연율,%) | 1.2(2.0) | 4.1(P) | | | 3.8(P) | | | - | | | - |
| 수 출(천억엔) | 639(637) | 48 | 53 | 63 | 58 | 58 | 61 | 60 | 58 | 60 | - |
| 수 입(천억엔) | 721(707) | 64 | 61 | 66 | 67 | 68 | 62 | 70 | 67 | 69 | - |
| 對한국 수출 | 49.7(49.1) | 4.01 | 4.25 | 5.21 | 5.07 | 4.61 | 4.54 | 4.77 | 4.59 | 4.57 | - |
| 對한국 수입 | 32.8(32.4) | 3.12 | 2.92 | 2.81 | 2.58 | 2.85 | 2.57 | 3.04 | 2.78 | 2.72 | - |
| 직접투자(억달러) | (1,223) | 234 | | | 331 | | | - | | | - |
| 對한국 투자 | (40) | 7.7 | | | 9.1 | | | - | | | - |
| 소비자물가(전기비,%) | ▲0.2(0.0) | ▲0.3 | 0.1 | 0.3 | 0.3 | 0.2 | 0.0 | 0.1 | 0.3 | 0.1 | - |
| 실업율(%) | (4.4) | 4.2 | 4.3 | 4.1 | 4.1 | 4.1 | 3.9 | 3.8 | 4.1 | 4.0 | - |
| 경상수지(천억엔) | 42.9(47) | ▲3.6 | 6.4 | 12.5 | 7.5 | 5.4 | 3.4 | 5.8 | 1.6 | - | - |
| 엔화 對미달러 환율 | 82.9(80.1) | 89.2 | 93.2 | 94.8 | 97.7 | 101.0 | 97.4 | 99.7 | 97.9 | 99.2 | 97.9 |
| 환율 對원화(100엔) | (1,413) | 1,197 | 1,166 | 1,161 | 1,148 | 1,100 | 1,165 | 1,130 | 1,142 | 1,095 | 1,080 |
| 외환준비고(기말 천억달러) | 12.5(12.7) | 12.7 | 12.6 | 12.5 | 12.6 | 12.5 | 12.4 | 12.5 | 12.5 | 12.7 | 12.8 |
| 국채금리(10년, 연리%) | 0.560 | 0.740 | 0.665 | 0.560 | 0.600 | 0.860 | 0.855 | 0.795 | 0.720 | 0.680 | 0.590 |

주1. ()는 역년(1~12월)기준

2.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3. (P)는 2차 속보치(개정치)

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세계와 일본의 FTA일람(2013년11월)』 JETRO, 11월6일
*출처: <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1524/07001524.pdf>
- 『사적·체험적인 종합상사론:다메이케통신Vol.530』 소지츠종합연구소, 11월9일
*출처: <http://www.sojitz-soken.com/jp/send/tameike/pdf/tame530.pdf>

② 주간경제이슈 : 미일간 최대 TPP 쟁점은 쌀, 자동차, 관세

□ 쌀의 관세율 778%에서 500~600%로 인하

-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TPP교섭에서 5개 중점 분야의 하나인 주식용 쌀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778%에서 단계적으로 500~600%까지 인하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
 - 생산조정제도 폐지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어서 관세인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,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유지해 온 고관세정책을 전환한 것임
- 쌀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미국과 호주에서 요구
 -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쌀가루와 사료용 쌀에 대해서만 관세철폐를 검토하고 있으나, 미국은 주식용 쌀에 대해서도 수년이 걸리더라도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
- 일본정부는 쌀에 대한 관세의 완전철폐에 대해서는 국내 농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거부해왔음
 - 그러나 관세율을 인하하면 일본산 쌀의 수출촉진과 국내 농가의 대규모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,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
 - 주식용 쌀의 관세와 관련하여, 자민당 이시바시게루(石破茂) 간사장은 생산비용을 인하하면 관세를 인하해 나가더라도 국내 농업이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세인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

□ 쌀에 대한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관세인하로 근본적인 개혁 추진

- 쌀에 대한 관세율 778%는 일본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의 부분개방을 수용하는 대신에 최소시장 접근방식(minimum access)으로 설정한 것으로서, 수입쌀과 60킬로 당 평균 2만 엔의 가격차를 두어 수입 급증을 방지해 왔음
- 자민당 내부에서는 500%대의 관세율이라면 수입급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, TPP를 계기로 생산조정제도 폐지와 관세인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쌀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침

□ 일본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유예기간, 20년으로 최장기화

-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TPP교섭에서 미국이 일본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협정발효 시점으로부터 20년 정도 경과한 후에 철폐할 공산이 커짐
- 일본은 협정발효 5~10년 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, TPP 교섭가운데 철폐유예기간을 최장기간으로 한다는 미·일 합의를 기초로 미국이 양보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

- 13년 4월 미·일 사전협에서 채택된 합의문서에 따라,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하여 TPP 교섭에서 인정되는 철폐유예 최장기간을 단계적인 인하방식으로 철폐하기로 함
- 이는 미국이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, 한·미 FTA의 경우(승용차는 5년)보다도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훨씬 김
- 일본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승용차가 2.5%, 트럭이 25%로, 관세철폐 시까지 20년이 걸리는 경우, 미국시장에서 일본차가 장기간 불리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됨
- 더욱이, EU 등 여타 국가들과의 통상교섭에서도 같은 조건을 요구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
- TPP 관세교섭은 2국간 교섭으로 실시되고 있는데,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은 금년 여름 이후,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의 TPP 교섭에서 관세철폐까지의 기간을 FTA와 같게 할 방침
-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쇠고기와 초콜릿을 2018년 이후로 하고 있어 TPP 참가국과의 교섭에서도 같은 정도의 유예기간을 요구
-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, 미국은 합의문서대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유예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하겠다고 주장

□ 일본정부, 미국에 TPP타결 협력 대가로 조기 관세철폐안 제시

- 일본의 지적재산 및 투자관련 규정 등 난항중인 교섭 분야에서 금년 중 TPP 타결을 목표로 하는 미국에 협력함으로써, 양보를 얻어낼 생각임
-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업계와 의회가 관세의 조기철폐와 단계적인 인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
-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없으면, 농업분야의 교섭에서 비철폐대상 농산품의 수를 당초 상정한 것보다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국내에서 높아질 전망

③ 경제정책동향

□ 국가전략특구법안 각의에서 결정

- 일본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법안을 각의에서 결정
 - 동 법안은 아베노믹스의 핵심법안으로서,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, 통과되는 경우 이르면 내년 초에 전국적으로 3~5개의 특구를 지정
 - 동 법안은 건축기본법에 특례를 인정하여, 고층아파트 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등 외국기업 유치에 겨냥한 완화책을 담고 있음
- 특구지정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
 - 자문회의는 총리, 관방장관, 신임 국가전략특구담당상, 민간전문가 등 최대 10명 내외로 구성
-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문회의 산하에 특구별로 설치하는 국가전략특구회의에서 결정
 - 특구담당상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, 민간사업자 등 3자가 계획을 수립,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총리가 결정
- 외국기업 유치관련 규제완화
 - 외국인의 근무 및 생활환경 개선 관련
 - 고층아파트 건설이 용이하도록 용적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
 - 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고 다국어 간판을 달아 외국인 생활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
 - 해고 및 고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
 -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외국기업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서, 특구별로 고용노동센터를 설치
 - 고용 관련 재판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계약에 관한 사전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현재 5년인 고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

□ 일본정부, TPP교섭에서 자유화율 95% 전후로

- 일본정부는 TPP교섭에서 전체 수입품목 중 관세철폐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95% 전후까지 끌어 올릴 방침

- 1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되는 교섭관회의에서 각국에 제시하기 위한 제안으로, 이제까지는 90% 전후에 그치고 있었음
- 일본의 총 무역품목수는 9,018개로 이중 약 4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
- 관세철폐 시기는 즉시, 3년, 5년 10년, 최장기(10년 초과)로 구분하는 외에, 관세는 유지하되 현재보다도 인하하는 품목도 제시
- 그동안 일본정부는 쌀, 보리, 설탕, 유제품, 쇠고기·돼지고기 등 5개 분야는 관세를 유지하는 성역으로 설정해옴
 - 5개 분야의 품목 수는 총 586개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유지하더라도 자유화율은 93.5%에 그침
 - TPP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11개국들은 이미 모두 95% 이상을 제시한 가운데,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은 일본의 관세철폐안이 너무 낮다고 비판
- 일본정부는 여타 국가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, 5개 분야 중 관세철폐대상품목들을 선별
 -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과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초콜릿과자와 쿠키, 우설과 가공용 쌀 등의 관세를 철폐할 방침
 - 5개 분야 외에도 와인, 일본주(사케), 피혁제품의 일부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, 소금과 담배의 관세를 철폐하는 안도 부상
- 수입와인에 대한 일본의 관세는 가격의 15% 또는 1리터당 125엔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음
 - 초콜릿과자의 수입관세는 10%, 쿠키는 13~20.4%, 모피는 15~20%
 - 와인은 칠레와 FTA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으로, TPP에서도 이와 같게 하도록 할 방향
 - 초콜릿과자와 쿠키는 일본 국내수요에서 점하는 수입품 비율이 10%정도로 낮아, 외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철폐해도 영향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분석
- 일본 자민당의 니시카 와고야(西川公也) TPP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유화율 95%는 너무 높다고 하면서, 농업단체 등을 배려
 - 일본정부는 교섭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

4 일본기업동향

□ 닛산·르노 연합과 미쯔비시자동차의 제휴 확대

- 닛산자동차·르노연합이 미쯔비시자동차와의 제휴를 확대한다고 발표
 - 닛산과 미쯔비시자동차가 일본 국내시장에서 경자동차 분야에 그치고 있던 제휴를 세계시장에 확대하여, 전략 소형차와 전기자동차 공동개발 등을 검토하고 르노의 한국공장도 활용할 방침
 - 양사의 제휴 확대로 자동차업계의 국제적 재편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임
- 닛산·르노연합과 매수한 러시아의 최대 자동차업체 아우토와즈를 합친 2020년 세계판매대수는 약 800만대, 여기에 미쯔비시자동차의 100만대를 합하면 900만대가 됨
 - 닛산·르노연합과 미쯔비시 간의 제휴가 성사되면 세계시장점유율 제1위인 도요타자동차(975만대)에 이어 미국의 GM(929만대), 독일의 폭스바겐(928만대)에 필적하는 규모의 그룹으로 등장
- 닛산·르노연합과 미쯔비시자동차가 제휴함으로써, 르노는 취약했던 동남아시아시장에서 발판을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, 하이브리드(HV)에 뒤져있던 EV(전기자동차) 등 에코카 분야에서도 공동개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
 - 미쯔비시자동차는 르노차량을 기본으로 하여 미쯔비시브랜드의 신형 세단 2종 차량을 발매
 - 제1탄은 북미수출 수출용 중형세단으로, 르노 산하의 한국·르노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에서 생산, 한미 FTA를 활용하여 북미지역에 수출하게 되는데, 수출차종은 도요타자동차의 캠리와 혼다의 어코드 급
 - 제2탄은 세계 전략차종인 소형세단 발매로, 르노로부터 2개 차종을 공급받음으로써 신형차의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
 - 르노삼성은 가동율이 부진하여 닛산으로부터 다목적스포츠차량(SUV)의 생산을 위탁받을 예정인데, 여기에 미쯔비시자동차로부터의 생산위탁을 추가하여 동남아시아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쯔비시자동차의 판로를 활용할 계획
- HV 등에 비하여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분야에서도 제휴를 확대
 - 닛산과 미쯔비시자동차는 2011년에 공동출자회사 NMKV를 설립하여 경자동차의 개발·생산 분야에서 제휴하고 있으나, 경차의 차대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EV(전기자동차)를 공동 개발할 계획
 - 최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소형차도 개발, 세계 각국에서의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

- 자본제휴와 관련해서는 닛산측은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함
 - 그러나 과제로 남아있던 미쓰비시자동차의 우선주 처리문제가 해결되어 양사간 협력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, 닛산-르노 연합과 미쓰비시자동차의 자본제휴도 가능성도 있음
- 양사의 제휴가 확대됨에 따라, 앞으로 자동차의 국제적 재편은 도요타자동차, 닛산-르노 연합 등 4강을 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, 다음 차례는 스즈키와 마쓰다의 제휴가 초점이 될 것으로 관측

□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(IHI), F35 엔진생산에 참여키로

- 일본 IHI사가 미국 로키드마틴이 개발하는 최신 스텔스전투기 F35 엔진의 공동 생산계약을 미국 P&W와 체결
 - 일본이 2017년 이후 구입하는 38대분의 엔진부품을 제조하여 P&W에 납품
 - F35기의 관련부품분야에서 일본기업의 생산참여가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, 이 외에도 미쓰비시전기가 레이더부품을, 미쓰비시중공업도 기체의 일부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F35는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, 2019년 개발완료 예정
- 일본은 F35를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로 선정하여 최소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
 - 일본이 구매하는 전투기 중, 2016년에 인도받을 4대는 미국에서 조립하여 조달하고, 나머지 38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라인을 신설하여, 최종조립을 담당할 예정임
- IHI가 P&W에 납품하는 것은 17개 엔진부품으로 핵심부품인 팬과 터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
 - 생산거점은 동사의 소마(相馬)공장과 구레(呉)공장으로, 설비투자는 방위성이 담당하고 생산은 당분간 일본 국내 조달분에 한정되나, 장래에는 수출용에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
- 일본정부는 금년 3월, 무기와 무기제조관련 설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서, F35의 부품수출을 허용한 바 있음
 - 경제산업성 간부는 세계적인 추세인 국제공동개발에 참가할 수 없으면 일본은 낙오된다고 강조
- IHI는 P&W와 GE 등에 터빈과 압축기 등 주요 부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음
 - 동사는 품질과 정확한 납기로 정평이 나있어 내열성이 강한 세라믹복합재를 비롯하여 엔진의 소재기술분야도 주목받고 있음

5 한국관련워치

□ 징용자 배상판결과 한일경제관계

- 경단련 등 일본경제단체에서 11월 6일, 전시 중 일본기업들에게 강제 징용된 한국인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, 원만한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성명을 발표
 - 일본정부와 경제계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, 한국에서 앞으로도 같은 소송이나 판결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- 성명발표는 일본 경제계의 첫 번째 반응으로서, 배상문제는 이제까지 순조로 왔던 양국 관계를 훼손시킬지도 모른다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
 - 더욱이 한국에 대한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르며 나아가 양국간 무역투자관계를 냉각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
- 재심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은 각각 한국 대법원에 상고
 - 이들은 원고 측이 요구한 조기화해에는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,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지출을 하면,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
- 일본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태의 확산임
 - 한국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 수는 22만 명에 이르는데, 전시중 동원에 관여한 일본기업은 약 30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
 - 컨트리리스크도 높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음
 - 일본기업의 법무상담역은 사법제도의 안정은 비즈니스가 기본이라면서, 여론에 의해 사법부의 판단이 흔들리면 한국에 대한 평가가 떨어진다고 지적
- 일본정부는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할 필요는 없고, 한일청구권협정에 담긴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, 한국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
- 세코 히로시게(世耕弘成) 관방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
 - 한국의 대응이 불충분하면, 2국간 협의나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대한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은 전하고 있음

□ 일본, 한중일 FTA의 자유화율 90%이상으로 한국과 중국을 설득

- 일본은 11월 26~29일 개최 예정인 한중일 FTA교섭회의에서 자유화율을 10년 내 90%이상으로 하도록 한국과 중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 - 이는 일본이 TPP교섭의 중반국면에서, TPP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음
 - 중국은 국영기업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,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TPP에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중일FTA와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연대(RCEP) 등에 열의를 보이고 있음
 - TPP는 2국간 FTA를 우선시해 온 한국도 변화시키고 있는데, 최근 한국이 한중일FTA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은, 일본의 TPP교섭참가로 지적재산권 등 무역 이외 분야에 관한 다국간 룰 제정 면에서 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
- 3월의 서울, 8월의 상해회의에 이어 3번째인 이번 회의는 관세철폐가 주된 의제로서, 일본은 8월 회의에서 자유화율 목표를 10년 내 90%이상으로 제시
- 이에 대해, 중국은 우선 40%에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한편, 한국은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보여 3국간 의견이 불일치
 - 특히 중국은 농수산물과 광공업품 분야에서 각각 별도의 자유화율을 정하자고 제안
 - 일본은 중국이 농수산물 분야에서만 높은 자유화율을 요구할 경우, 쌀과 설탕 등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반대하고 있어 모든 품목에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